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마지막 점검을 SI특별방역기간 평시체제로 전환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오던 SI특별방역대책이 3월부터 평시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번 겨울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정책 및 활동은 물론 양계인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양상을 볼 때 철새가 돌아가더라도 분변에서 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2달 정도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SI특별방역대책'을 통해 가금류 사육농가 중심의 자율적 차단방역 유도, 주요 유입가능경로에 대한 예찰강화, 차단방역 및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벌여왔다. 본회에서도 감염원이 철새에 의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계사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농가에 인식시키고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었다.

SI 특별방역기간중인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에서 H7N8형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관찰되면서 검출농가에 대한 살처분 및 긴급방역활동이 취해져 한때 업계를 긴장시켰으나 혈청 양성 가검물을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서 일단락이 되었다. 이때 일본은 우리나라산 가금육 수입을 일시 정지한 바 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실태 일제점검을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6,856농가중 3개도에서 43농가가 적발되어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국경검역에 있어서 금년 1월 태국발 항공편에서 애완조류 밀반입 사례 2건이 적발되어 앵무새 70마리와 알 191개를 소각하는 등 방역활동을 벌인 바 있다.

외중에 시·도의 오리 혈청검사법이 면역확산법(AGP)에서 혈청면역법(ELISA)으로 개선되면서 SI검색율이 향상된 반면 고병원성에 대한 검역원의 확인검사 기간중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가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로 H5/H7형체검사를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종란을 통한 난황 검사법이 개발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혈청이 아닌 종란으로 예찰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환경 오리농법에 사용한 오리의 시 노출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반오리와 같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키로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가에서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항시 인식하여 앞으로는 국내에 시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종계장·부화장 방역 허점은 없는가! 좋은 씨앗이 곧 농가의 경쟁력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건강한 병아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차단을 위해 종계장 단계에서 산란을 시작하기 전 약 20주령에 1차 검사를 하여 감염이 확인된 계군의 경우 도태하고 도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검사와 도태를 추진하기 위해 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을 금지하도록 되어있다. 종계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금지는 난계대 전염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생균백신(9R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가 생겨 감염종계를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종계장내 가금티푸스 예방접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의 음성적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난계대 전염에 따른 실용계농장의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종계인들은 백세미를 생산하는 산란계가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의 4각지대에서 무방비로 부화,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전에는 종계장의 청정화를 기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6년 본회에서 250개 종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농가가 27%로 나타났으며, 검역원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90%의 종계장에서 생균백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안모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계장내 백신사용 농가에 대한 색출과 백세미 생산용 산란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이다.

앞으로는 백신접종 확인 검사법(9R 스트레인을 이용한 진단액 생산)이 도입되어 쉽게 접종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성적으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 방법을 금년중 시·군을 통해 적용시켜 백신접종 계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종계로서의 사용금지 및 도태장려금 지급까지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세미도 별도의 관리지침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등록 종계장 문제도 종계부화장 방역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말 전국 486개 종계장 중 무등록 종계장이 143개로 전체 2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등록 종계장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가건물로 되어 있어 종계장으로서의 자격미달로 시·군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거나 관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농가홍보를 통해 등록을 하도록 종용하고 시설이 열악한 곳은 시설개선을 유도하거나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규제들이 완화된 상태에서 다시 법을 강화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종계·부화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이드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배하는 농가는 당연히 이에 대한 댓가를 치러야 하며, 농가들도 좋은 병아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좋은 씨알의 생산이 곧 농가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씨알을 생산하는 백세미용 산란계와 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전혀 방역개념 없이 생산되는 행태를 최소화 하더라도 우리 종계장의 생산환경은 한층 업그레йд 될 것으로 본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키로 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에 도움줄듯

정부는 최근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1조원 규모의 자금을 1년거치 연리 3%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계열화업체 농가 제외)이며, 용도는 사료구매자금으로 지원된다. 양계분야는 농가당 한도금액이 5천만원으로 타 업종에 비해 적은 액수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용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경영에 큰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농가들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긴요한 자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이 단기간 내에 안정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1년의 사업기간은 너무 짧으며, 5천만원의 한도액은 경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료가격 뿐 아니라 원유가격 폭등으로 생산원재료가 올라간 시점에서 연리 3%조차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2007년도 기준 양돈(연간 540톤) 다음으로 사료사용량(연간 440톤)이 많고, kg당 사료단가가 390원으로 비육우 381원, 양돈 367원, 착유우 340원으로 가장 높게 형성되는 시점에서 타 축종에 비해 지원자금 한도가 가장 적게 배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사업기간을 1년이 아닌 2~3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자금지원이 오히려 농가부채를 늘려줄 수 있다는 의견도 도출되고 있지만 이번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대책을 통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계**